

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본격화



손에 손잡고... "개헌"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개헌 관련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속도 내자" 한목소리

민주 "지방분권"·한국당 "중임제 반대"·국민의당 "다당제"

여야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것에 맞춰 여야 지도부도 같이 움직이면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방향은 물론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번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2월 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 개헌 방향을 놓고는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는 등의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꼬집으며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당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뿐 아니라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당제"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당제를 정착 시키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둘 다 부정적이다.

한편,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동일가지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 등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일가지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위는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시·군·구로 구성될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시·군·구 1개 초과할 때마다 1500만원씩 가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권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 가라앉지 않는 통합 갈등

안철수, 원외세 물이 나서

반대파 '평화개혁연대' 맞붙

자체조사 "통합시 지지율 19.2%"

의원총회에서 호남 의원들에게 대표직 사퇴촉구를 받으며 코너에 몰린 안 대표가 23일부터 원외로 눈을 돌려 통합론 세를 이어 나갔다. 원내 기반이 취약한 만큼 원외위원장, 일반 당원 등 원외 지지기반을 결속시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당민심과 당헌당규를 무기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감

행해 승부를 보겠다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뒀다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 등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원내 정치(의원 다수 결정)를 부인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멈추라"고 경고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평화개혁연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나란히 참석, "정책연대를 정기국회 기간에 보여줘야 하며 오늘이 그 시작

점"이라고 통합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오후 원외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당 통합에 후호적인 여론이 많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서 사퇴촉구를 받으며 코너로 몰렸던 안 대표는 다소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이날 통합론 관련 추가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통합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리서치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유권자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포인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를 가정한 지지율은 19.2%로 더불어민주당(47.5%)에 이어 2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친(親)안철수계 이인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군사독재의 잔존세력,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운동권 세력이 대립해온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중도통합을 당의 노선으로 제시했다.

호남 중진들은 이에 대해 '통합 불가론' 재천명하면서 반(反)안철수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일부와 통화에서 "원내 정치(의원 다수 결정)를 부인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멈추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유성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로 인한 안팎의 상황을 가리켜 "정치초년병의 무모한 대권욕이 빛을 처참한 참상"이라고 안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국민의당 물관리 일원화 공조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물 관리와 관련한 지난 20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가 물 관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이날 "국민의당과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가 됐다"며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협의체 위원장인 만큼 정부조직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위원장 역시 "여당의 요청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논의했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당이 발의한 물관리 기본법도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2개월여간 논의가 공전했다. 한국당은 또 전날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육상육' 위원회라며 반대했다.

민주 "한국당 공수처 반대 이율배반"

"말로만 검찰 개혁 외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은 말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공수처 논의 자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공수처와 비교해 논의가 설 익은 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을 한국당이 피해가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안이 나온 상태이며 국회에도 여야 의원

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제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지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속안건으로 지정돼도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현 수준의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선택타대로 쓰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으므로 한국당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공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자체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의무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